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탄소 배출권시장 탄소배출감축법안(CPRS)의 의회통과가 시장 활성화와 관건



온실가스 감축법안(GGAS)

호주의 NSW(New South Whales)주에서 2003년에 도입한 GGAS(The Greenhouse Gas Reduction Scheme, 온실가스감축체계)는 세계에서 가장먼저 제정된 의무온실가스배출 거래법안의 하나이다.

GGAS는 NSW주의 전기소매업체를 비롯한 대규모 전기소비처에 온실가스배출량에 비례한 온실가스배출 절감노력을 부여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현재 도입이 보류되어 있는 탄소배출감축법안(CPRS -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제도와 흡사하나, 특별히 아래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저탄소 전기 생산 및 발전효율 개선(Generation)
- 숲 가꾸기를 통한 탄소포집능력(Carbon Sequestration)
- 대규모 전기소비처 현장의 다양한 탄소배출 절감노력(Large User Abatement)
- 폐열발전 등을 통한 현장 에너지 재사용 노력(Demand site Abatement)

위의 활동을 통하여 절감된 탄소배출량은 톤당으로 환산되어 주정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는 이 제도는 2009년 6월 30일부로 운영이 끝났으며 2009년 7월1일부로 Energy Savings Scheme(에너지절감법안)으로 대체되었다.

탄소배출감축법안 의회통과가 우선되어야

호주는 탄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안인 탄소배출감축법안(CPRS)의 의회통과가 보류된 상태로, CPRS가 통과된 이후에나 탄소거래소가 활성화가 될 전망이다. 추후 탄소거래가 본격화 되면 전용 탄소거래소가 뉴사우스웨일즈주 주도인 시드니에 설치될 예정이며, 런던이 유럽의 온실가스배출거래의 중심지인 것처럼 시드니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온실가스배출권시장의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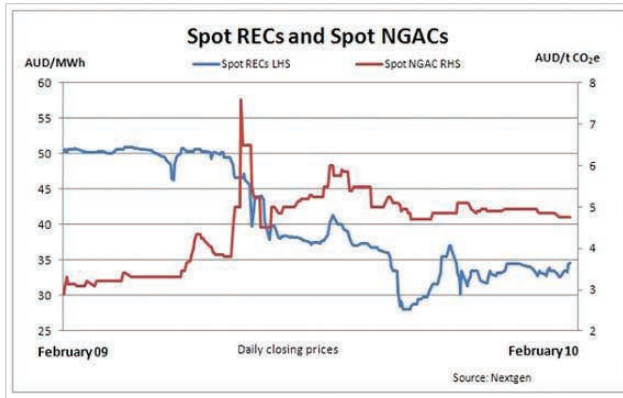
CPRS가 제정이 되면 호주전체 탄소배출의 75%를 차지하는 약 1,000여 곳의 배출처에 배출권(Australian Emission Units)이 부여되고, 연간 배출권 거래 규모는 약 A\$ 80억 ~110억 (US\$ 78 ~ 97억)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에서는 탄소거래소 운영을 위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패널로 확보하고 탄소거래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시드니의 증권거래소(ASX)에 탄소거래소가 설치되었으나, 탄소거래를 이끌 CPRS법안이 정치적인 이유로 의회통과가 보류되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탄소거래소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2001년 의무신재생에너지 목표법안(MRET) 도입 시 시작된 REC(신재생에너지 증명서)와 2003년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도입한 뉴사우스웨일즈 온실가스감축증명서(NSW

Greenhouse Gas Abatement Certificate, NGAC)가 탄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나, CPRS법안 미도입으로 거래소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다.

2010년 2월 기준, 지난 12개월간의 REC 및 NGAC 가격추이



2013년까지 탄소거래제도 도입은 요원

2010년 8월 총선으로 재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2013년까지의 CPRS 법안 도입 불가방침이 현재까지 변경될 전망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약 80~110억A\$에 이르는 탄소거래시장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16차 기후협약 당사자국 회의 이후 불붙은 탄소감축 논쟁

지난 12월 10일 멕시코에서 폐막된 16차 기후협약 당사자국 회의 이후 호주의 탄소감축 규모에 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호주의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로 설정되어 있는데 유럽, 일본 등 기타 의무감축국이 각각 20%, 25%로 설정한 것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이 제기되어 왔다.

공격의 포문은 호주의 녹색당이 열었다. 녹색당은 현재의 집권당인 호주 노동당과 연정을 하고 있는 상태로, 녹색당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큰 상황이다. 녹색당은 먼저 세계적으로 탄소감축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감축량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2020년까지 25~40%의 감축목표를 세울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녹색당의 지적은 다시 호주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광업 분야의 반대에 부딪혔다.

광업은 호주의 수출을 비롯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산업 분야로, 정부의 탄소감축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광업계는

호주의 경우 5%의 탄소감축을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주장한다. 호주 광업위원회의 위원장인 Brendan Pearson은 호주 정부의 5% 감축안을 시행한다면 전체 GDP의 1% 감소 이상의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 뻔하며, 이는 유럽의 20% 감축 시 나타나는 경제손실보다도 큰 것이라고 강조한다.

광업계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반 산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호주 산업조직(Australian Industry Group)의 Heather Ridout 위원장은 “2000년 수준의 5%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경제가 성장했을 때(Business as usual)와 대비하면 실제적으로는 21%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NSW 주의 화력발전소



출처 : <http://indymedia.org.au>

딜레마 속에서도 정부는 감축정책 추진 예정

하지만 이러한 딜레마에서도, 호주 정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호주는 교토협약 부속서 1에 속한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2012년까지 온실가스 증가를 허가받은 국가이고, 현재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8%가 증가한 수준으로, 이미 20%대의 감축목표를 수립한 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감축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이미 2011년까지 탄소세를 마련하든, 탄소거래제를 마련하든, 두 가지 조치를 동시에 운영하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탄소에 가격을 매겨 배출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 내년에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살아날지, 다시 침체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